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한우정책 방향(안) 2회

본 내용은 9월호에 이은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한우정책 방향(안)"을 요약한 것입니다.

발표자 : 농림부 축산국장 김주수

3. 축산물유통체계 개선

축산물유통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은 냉장부분육 유통과 안전성 향상을 촉진하고, 대형화·표준화 및 전자거래화 되어가는 유통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간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한우농가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지향적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신물류체계 핵심거점으로 육성

- ① 2001년까지 9개소 건설계획이 조기 완료 되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냉장부분육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유통단계를 축소
- 2001년에 완공 예정인 2개소의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이 조기 완공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이미 99년 완공·가동되고 있는 7개소와 함께 축산물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 IMF 이후 환율 및 물가상승을 감안 표준사업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LPC는 17%, 중규모 LPC는 표준사업비를 33% 인상함과 아울러 LPC건설자금 금리를 8→5.3%로 인하한다.
- 기존의 유통단계를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한다.

② 완공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원료구입등 제한된 용도의 원료구매자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원액을 160억원으로 확대한다.
-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업체에 대한 조치로, 가동이전에 생산자단체가 업체를 인수하거나 지분참여를 할 경우 2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정상화 대책을 강구한다.
- 가맹점을 늘려 판매망을 확충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위탁판매체계 구축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촉진한다.

나. 고급육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① 우수송아지 유통을 위한 송아지 전자거래시장 개설 추진
- 우량송아지에 대한 생산정보로 가속개발정보,

어미소의 등급판정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송아지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전산프로그램을 확대·발전시켜 지역별 송아지 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활용한다.
- ② 공판장, 도축장 시설 및 기능을 보강하여 냉장부분육 유통확대
 - 공판장, 도매시장의 신규건설은 중단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지육경매체제에서 부분육 가공 경매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부분육거래 시설지원과 부분육 상장경매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도축장간의 사업연합체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3개이상 도축장이 통합할 경우 도축장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포장육 유통에 적극 호응하는 가공업체에 대하여 가공설비, 박스포장비용 등의 자금을 지원한다.
- ③ 브랜드업체 적극 육성에 의한 얼얼있는 한우고기 생산으로 유통기반 확대 및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
 - 브랜드주체에 대하여 기존 가맹점 지원이외에 가공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생산·유통이 계열화된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단체의 브랜드(냉장육)가맹점설치를 지원한다.
 - 브랜드업체에 대한 축산물품질인증제를 확대 실시한다.
- ④ 대형유통업체 출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부터 생산단계까지 추가가능성을 높여 수요자 지향적 생산·유통체계 구축
 - 표준규격이 미 제정된 축산물표준화, 규격화 촉진 및 국제 표준 바코드 도입 등으로 디지털 유통에 적극 대응한다. (2001년 상반기 시범 실시후 확대)
 - 원산지·품종 등이 표시된 소매용 소포장 육류 촉진을 위해 가공업체에 규격포장비용을 지원하고 표준바코드와 연계하여 도입한다.
 - 농산물통합쇼핑몰 개설 등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용한다.

- 축산물바코드와 한우귀표간의 연계로 생산·도축·가공·유통 전단계에서의 추적가능성을 확보한다.
- ⑤ HACCP체도의 단계별 적용으로 유통단계 위생관리 체계확립
- 2000. 7. 1부터 100두이상 도축장 또는 축산물처리장에 우선 적용하고 2003. 7. 1까지 도축장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의무화한다.

다. 농축협 유통망의 통합연계로 경쟁력 있는 선진 유통조직 구축

- 통합농협중앙회 유통망의 축산물판매코너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국내산 축산물 전용판매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국내산 축산물판매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높이고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의 구심점으로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
- 지역브랜드 축산물판매와 음식점 기능을 병행하는 지역조합의 산지 축산물판매장 모델 개발 등 생산자단체의 직판기능을 확대한다.

라. 식육판매점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소매유통 중점개선

- ① 정부지원 식육판매사업자 선정시 정책효과 극대화 및 호응도 제고
 - 선정시 기존 식육점 중에서 우선 선발을 통해 식육판매점의 수를 줄이고 규모화·현대화 제고를 유도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인다.
- ② 한우전문판매점·브랜드가맹점 대폭 확충으로 선도적 소매점 육성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확대 육성으로 한우고기 판매망을 강화한다.
 - 한우고기 브랜드가맹점 확충으로 소비자에 대한 내장브랜드육 공급기반을 확대한다.
- ③ 모범업소 지정제 실시로 기존 정육점 정예화·현대화 유인
 - 원산지표시제, 등급별·부위별 구분판매제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10평 규모이상의 업소에 식육판매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 시장·군수, 축산기업중앙회,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브랜드육가맹점으로 육성한다.
 - 둔갑판매로 적발된 경우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4. 한우고기 소비기반 확충

한우고기 소비기반 확충의 기본방향은 육류거래 과정의 투명성제고와 부정유통 근절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킴과 아울러 소비자에게 올바른 쇠고기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견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데 있다.

- ① 쇠고기 거래정보 기록의무화 및 육류 소비자 가격 조사 등 유통투명성 확보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쇠고기 유통경로에 따라 낭해 육류에 대한 정보도 함께 이동토록 제도화하여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고 역추적 가능성을 보장한다.
 - 도매시장 지육경락가격에 제비용과 적정마진을 고려한 소비자가가격을 산정·발표하여 산지와 소비자가가격 연동을 촉진한다.
- 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추진, 「등급별·부위별 구분판매제」확대 시행으로 부정유통으로 차단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현행 메뉴판의 「식육 부위별 중량당 가격표시」에 「원산지」를 병행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 쇠고기 등급별·부위별 구분판매지역을 2000. 7. 1부터 인구가 많은 79개 거점지역으로 확대하고 점차 모든 시·군 지역으로 확산시킨다.
- ③ 둔갑판매 등 쇠고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원산지 표시의 훼손,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 한우와 젓소고기 감별기술 현장적용 및 한우와 수입쇠고기간 감별기술 조기개발을 추진한다.
 - 「부정축산물고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수입육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강화한다.
 - 축산물 병예감시원제도의 활성화로 민간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 ④ 거세한우고기 등 고급육에 대한 우수성 홍보
 - 한우고기 판매장에 거세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문안을 게시한다.
 -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올바른 선택방법에 대한 TV홍보를 실시한다.
- ⑤ 시장반응 환류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
 - 유통중인 유해축산물에 대한 회수제(Recall)를 도입한다.